



국제리뷰

- 벨기에의 성 주류화 정책

김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과제 : 방글라데시

이선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기에의 성 주류화 정책

김 경 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 센터의 연구진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들과 벨기에를 방문하게 되었다. 벨기에를 출장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독립된 「성 주류화 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여성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성 주류화법을 제정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6년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는데 여성의원들이 앞장섰기에 성 주류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두 나라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벨기에 방문단의 관심사는 성 주류화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모아졌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성 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방문기간이 여름휴가 중인 7월이어서 담당자를 섭외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성 주류화 정책을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플란더스 주정부의 성 주류화 담당자와 연방의회의 의원, 국제적인 성 주류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브뤼셀 대학의 우드워드(A. Woodward)교수와 연락이 되어 만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벨기에 성 주류화 정책의 제도화과정과

플란더스 주정부의 성 주류화 실행현황을 소개하면서 벨기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한 자료는 벨기에의 성 주류화 관련 문헌과 벨기에를 방문하여 만났던 성 주류화 담당공무원, 연방의회 의원과 보좌진들, 전문가들과의 면접내용이다.

2. 벨기에 성 주류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

벨기에 정부는 유엔이 개최한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성 주류화 행동강령의 내용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나라이다. 이전에 벨기에의 ‘양성평등 정책(Equality policies)’은 성 평등에 대한 유럽정책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나라는 1993년에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내에 기회평등부서(the department of Equal Opportunities)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과 2003년에는 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북경행동강령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 주류화 법 (The Belgian Federal Law on Gender Mainstreaming)」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2010년에는 왕령으로 부처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부처 간 조정단(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Group, ICG)을 설치하여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는 성 주류화 제도 도입 자체로 성 주류화가 달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양성평등의 증진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즉 성 주류화 정책은 공공 정책의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성 인지적인 관점이 확산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벨기에에는 성 주류화 관련 법이 도입되었고, 남녀 임금, 고위직 진출, 고등교육 등에 있어서 비교적 성 주류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이행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플란더스 주정부의 성 주류화 실행

플란더스 주정부는 2007년에 제정된 성 주류화법을 근거로 기회평등정책(Equal Opportunities Policy)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 주류화 정책은 플란더스 기회평등부(Equality of Opportunity in Flanders), 기회평등위원회(Commission Equal Opportunities)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플란더스 내각은 5년 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에 구성된 내각의 9명의 장관 중 4명은 여성이다. 성 주류화 정책을 주도하는 기회평등부는 젠더, 성 정체성,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영역에서, EU정부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관되게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오던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을 2005년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또한 기회평등위원회를 진행하는 주무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기회평등부는 정부 조직 이외의 평등 정책 입안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기관들을 긴밀히 연결하는 삼각연대(Velvet triangle)를 조직하여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플란더스 지역과 주정부의 성 주류화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 기타 공공 서비스, 연구자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관련 시민단체가 평등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장애물들의 개선을 플란더스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목표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플란더스 정부가 목표들의 내용에 합의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삼각연대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회평등위원회(CEO)는 정부 내 모든 정책 영역인 13개 부처에서 각 1인씩 지정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회평등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은 기회평등부와의 협조를 통해 실행계획의 작성, 모니터링,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기회평등위원회(CEO)는 기회평등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주류화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결정사항이 각 부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위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검토 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며,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기회평등 및 인종주의 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on Equal Opportunity and Opposition to Racism)’를 설립하여 심도있는 성 주류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플란더스 주정부의 성 주류화 실행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2008년 기회평등부의 차별금지 정책을 담고 있는 법 제정을 계기로, 모든 정책 영역은 물론 장관들에게 개방형 조정방식(OMC) 사용을 의무화시켰다는 것이다. 개방형 조정방식(OMC)을 사용하는 목적은 첫째 플란더스 주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회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 둘째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의 강화를 위해서이다. 그밖에 플란더스 주 정부는 정책의 ‘젠더 목표’(OMC gender goals) 합의, ‘이행계획’(OMC gender action plans), ‘젠더 모니터’(OMC gender monitor), ‘이행 보고서’(OMC gender progress reports) 작성 및 제출 등 전체 정책 과정에서 개방형 조정방식(OMC)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란더스 주정부에서 진행해 온 개방형 조정방식(OMC) 단계는 “기회평등위원회 회의(연 5회)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플란더스 정부 내 13개 부처 장관들의 목표를 합의 → 개방형 조정방식(OMC) 목표들의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작성 → 이행 계획 평가 → 플란더스 정부 및 의회에 내용 보고” 등의 순이다. 현재는 2기 개방형 조정방식(OMC)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벨기에 연방의회에서의 성 주류화

벨기에 연방의회는 상원(Senate) 및 하원(Chamber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된다. 상원은 지역별 선거와 지방 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되며, 7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회

평등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가 성 주류화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상원의 남녀 기회평등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상원과 상원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시 자문을 하고 있다. 상원의 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관련 사안으로는 배우자 폭력, 성별 통계, 아프가니스탄과 티베트 여성의 상황,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후속 조치, 자문 기구 내의 동등한 남녀 수 등이 있다.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150명의 의원과, 11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Social Emancipation)가 성 주류화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원의 사회자문위원회는 현재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Valérie Déom이 의장을 맡고 있다. 사회자문위원회는 하원과 하원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시 자문을 하며, 성평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평등 증진을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성 주류화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성 주류화의 입법을 촉구하는 등 성 주류화의 제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벨기에 의회가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는 주요 역할은 성 주류화법의 영향평가를 권장하고, 의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관리감독, 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의회는 정부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성 주류화 실행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장관에게 구두로 질의하는데, 이때 통계자료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 정부정책을 관리감독, 조정

하려면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고, 법에 근거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성 주류화 매뉴얼이 있다. 벨기에의 의원들은 성 주류화 관련 자료나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의회 평가: 의회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Evaluating parliament: a self-assessment tool kit for parliaments)’를 제공하고, 의원들이 성 주류화를 위한 입법과정과 정책의 평가 및 관리 감독을 스스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5. 시사점

벨기에는 성 주류화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의 부처 간 조정단(IGC)에서 연방정부의 성 주류화 관련 업무를 상호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나라는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가 성 주류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성 인지적인

관점을 정책 사이클에 통합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플란더스 주정부는 개방형 조정방식(OMC)에서 젠더 목표 설정과 젠더 이행계획, 젠더 이행보고서, 젠더 모니터를 분석도구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방형 조정방식의 특징은 성 주류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행기관이 성 평등 목표에 합의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성 주류화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성 평등 정책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제도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벨기에는 성 주류화 관련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성 주류화를 주도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컸으나, 전반적으로 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미약한 편이어서 성 주류화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Bagilhole, Barbara(2009), "For diversity Against discrimination: From Gender main streaming, through Multiple discrimination, to Intersectionality", Teaching Intersectionality, Athena.
- Beetham, David(2008), Evaluating parliament: a self-assessment tool kit for parliaments, Inter-Parliamentary Union.
- Belgian federal administration(2007), Gender Mainstreaming a policy, Manual for the applic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Belgian federal administration.
- Lang, Sabine(2009), "Contested Institutionalisation: Women's Policy Agencies and Challenges to Gender Equality i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18, No. 1, March 2009, pp. 55-70.
- Manual for the applic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Belgian federal administration, Chapter 3, 2007.
- Wuiame, Nathalie(2011), The Belgian Federal Law on Gender Mainstreaming.
- Woodward, Alison, Barbara Bagilhole, Martha Franken(2011), "Teaching Intersectionality: Putting Gender at the Centre-Introduction, Teaching Intersectionality, Athena.
- <http://www.belgium.be/en/>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과제 : 방글라데시

이 선 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008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 검토에서, 원조체계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유·무상원조 통합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할 것과 우리나라의 ODA에서 성 주류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 CPS 수립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젠더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점협력국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에 대한 성 인지적 국가환경분석 즉, 국가계획 및 빈곤감소정책, 여성정책을 분석하여 방글라데시의 주요한 젠더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성 인지적 CPS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젠더 프로파일(gender profile)을 생산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ODA 영역 발굴을 목적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UNDP 방글라데시의 협조 하에 2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 중순에는 방글라데시 CPS 수립을 위해서 기재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2. 방글라데시의 빈곤감소전략과 젠더

방글라데시는 벵갈인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1971년 12월 1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국가를 건설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총 인구는 1억 4천 231만 9천 명으로 1제곱미터 당 920명이 분포해 있어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정치체제는 입헌공화국으로서 의원내각책임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2011년 구매력평가(PPP)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은 1,416달러, 1인당 국민소득(GNI)은 1,529달러로 최빈곤국에 속하나 2000년대 들어와서 연평균 5~6%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업국가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의류산업에서 발생한다.

이슬람교는 국교로서 인구의 89.5%가 믿고 있으며 그 밖에 힌두교와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가 있으나 미비한 수준이다. 환경적으로 강우량, 사이클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2009년 하시나(Hasina) 정부가 집권하면서 “변화를 위한 스텝(Steps Towards Change: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FY 2009-2011 (NSAPR II))”을 제목으로 제2차 빈곤감소전략이 수정되었다. 빈곤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정한 NSAPR II는 다섯 가지 전략적 부문, 즉 ①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을 지향하는 거시경제적 환경, ②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영역, ③ 빈곤층을 위한 경제개발의 핵심 기반시설, ④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 ⑤ 인적자원개발을 설정하였다. NSAPR II이 종료되는 2011년 이후부터는 제6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한다.

방글라데시에는 여성아동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ren Affairs: MoWCA)가 있다. 이 부처는 양성평등 정책형성,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개발이슈들을 담당하는 정부 내의 정책조정 중심 부처로 역할을 한다. 여성아동부는 ① 여성국(Department of Women's Affairs: DWA), ② 국가여성자문위원회(Jatiya Mahila Sangstha: National Women's Council), ③ 시주아카데미(Shishu: Children's Academy)로 구성된다.

북경행동강령에 나타난 12가지의 핵심이슈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담당관 네트워크(Women in Development, WID Focal Point Network)가 모든 정부 부서에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국가여성개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s Development: NCWD)가 있으며, 이 기구는 장관, 의회,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다. 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개발과 여성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Women's Development Policy 2011)’은 종교와 상관없이 고용에서의 여성 권리 강화, 상속법의 개정,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 인지예산과 성별분리통계 역시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에 명시되어 있다.

3. 방글라데시 여성의 현황 및 지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10)에 따르면 성불평등지표(Gender Inequality Index)는 116위로, 여성의 지위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방글라데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성(gender)과 계급에 따라 생활 공간까지도 분류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읽고 쓸 수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이 48.6% 정도이다. 2005~2006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6.8%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2%로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매우 크다¹⁾.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높다. 동시기 15세 이상 노동력 중 여성 노동력의 50.9%가 무학인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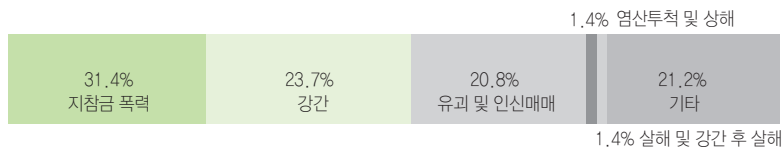
1) BBS(2009), Gender Statistics of Bangladesh, BBS.



* 자료 : BBS(2009), Gender Statistics of Bangladesh 2008, 92쪽 (Labour Force Survey, 2005-06, BBS에서 재인용).

〈그림 1〉 15세 이상 성별, 지역별 취업 현황 (2005-2006년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이 만 18세 이전에 혼인하는 조혼이 성행하며, 신부가 혼인할 때 시집에 가지고 가는 신부 혼인지참금이 관습으로 남아있다. 혼인지참금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신부 혼인지참금으로 인한 폭력이 31.4%, 강간이 23.7%, 임신투척 및 상해가 20.8%로 나타났다.



* 자료 : Citizens' Initiatives on CEDAW-Bangladesh (CIC-BD) (2010).
Combined Sixth and Seventh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EDAW Committee, Bangladesh, 91쪽 재구성.

〈그림 2〉 여성에 대한 폭력 (2008년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파괴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7천만 명이 건강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장거리에서 식수를 구해서 운반해야 하므로, 여성의 건강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잦은 재해와 경제적 피해 때문에 재해관리가 빈곤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2천 6백만 명)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들의 제한된 이동성과 부실한 인프라 때문에 재해발생 시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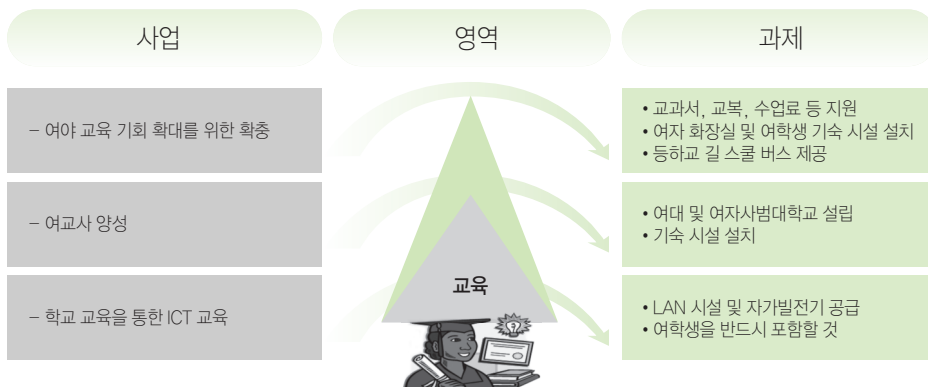
2) Kartiki, Katha (2011),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A Case Study from rural Bangladesh", Gender & Development, 19: 23-38.

4.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때는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을 북돋아 그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파리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파트너국가의 정책과의 조화와 일치(alignment)이라는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말 정부는 방글라데시 CPS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한 만큼, 방글라데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때 각 분야에 젠더를 크로스커팅하여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은 향후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제공할 때 고려할 것들이다.

가. 교육

남성 중심적인 방글라데시 사회는 학교환경이 여성친화적이지 못하여,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을 충분하게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을 확충과 함께, 교과서, 교복, 수업료 등의 지원과 등하교길 스쿨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방글라데시는 정전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무선통신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학교 교육을 통한 ICT 교육 시, 교육시설과 함께 자가발전기와 랜(LAN) 시설의 설치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여성교육의 발전 경험을 모델로 여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여자사범대학 또는 여자대학 설립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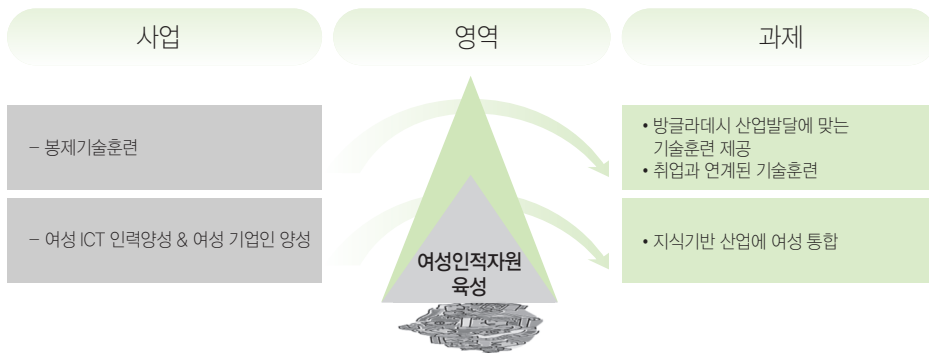


〈그림 3〉 교육 분야 사업 및 과제

나. 여성 인적자원 육성

방글라데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의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봉제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봉제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노동력을 숙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ICT의 성장을 중요시 하고 있는바, ICT를 활용한 지식기반 여성기업과 첨단 유망 벤처기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여성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센터를 모델로 하여 방글라데시의 여성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4〉 여성인적자원 분야 사업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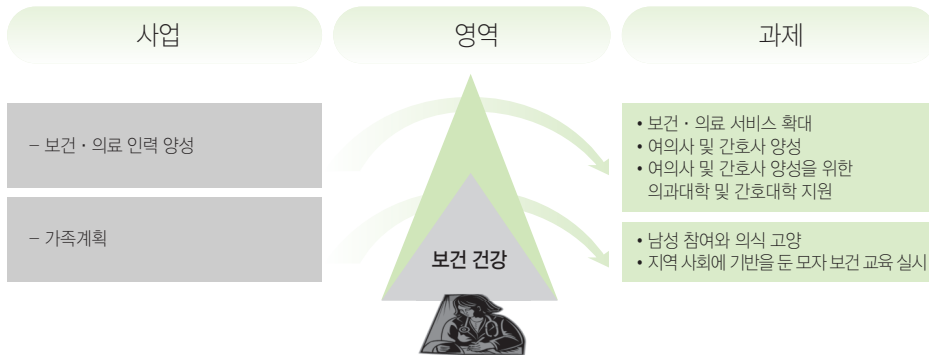
다. 보건 · 건강

방글라데시는 전국적으로 보건 ·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 헬스워치(Bangladesh Health Watch)(2008)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 10,000명당 5.4명의 의사가 있으며, 이 중 여의사는 0.8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시와 농촌지역의 격차가 커서 도시에서는 인구 10,000명당 18.2명의 의사와 5.8명의 간호사가 있는 반면 농촌에는 1.1명의 의사와 0.8명의 간호사만이 있다.³⁾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에서 보건서비스를 찾고 있다. 방글라데시 도시와 농촌 간의 보건 · 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보건 · 의료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의사와 간호사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교육 분야에서 여자대학교의 설립을 제언한바, 이 안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설립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피임 유경험 여성들 사이에서 경구용 피임약 사용이 2007년도에 66.4%이고, 남성정관수술보다는 여성 위주의 피임이 이루어지고 있다.⁴⁾ 따라서 가족계획에 대한 남성의 인식 고양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즉 마을 단위에서의 보건사회교육이 필수적이다.

³⁾ Bangladesh Health Watch (2008), "The State of Health in Bangladesh 2007: Health Workforce in Bangladesh: Who Constitutes the Healthcar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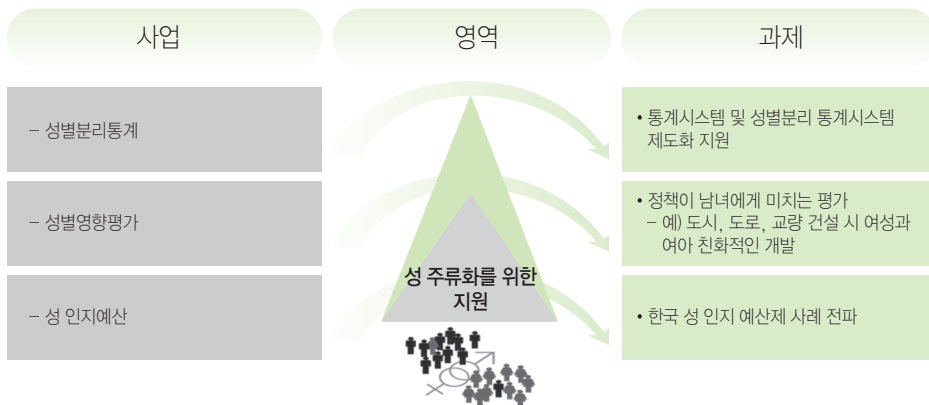
⁴⁾ NIPOPT et al (2009), Bangladesh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7, 58쪽.



〈그림 5〉 보건·건강 분야 사업 및 과제

라.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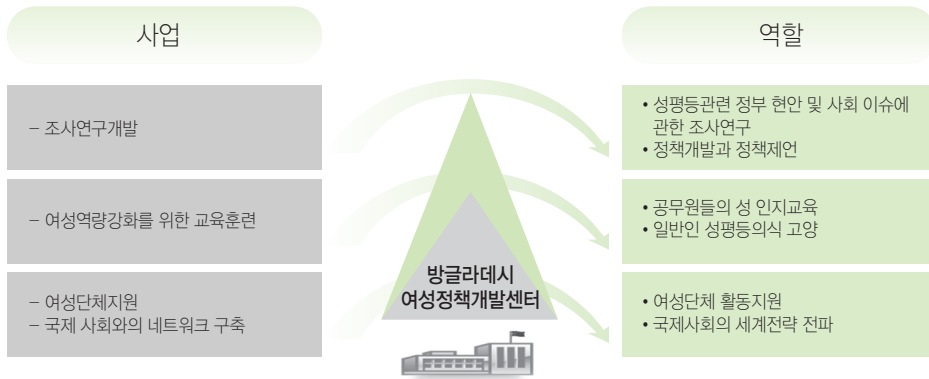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에서 상속법의 개정과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의 실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을 지난 5년간 제도화하면서 축적했던 경험, 여성친화도시 개발 등의 양성평등 정책 실행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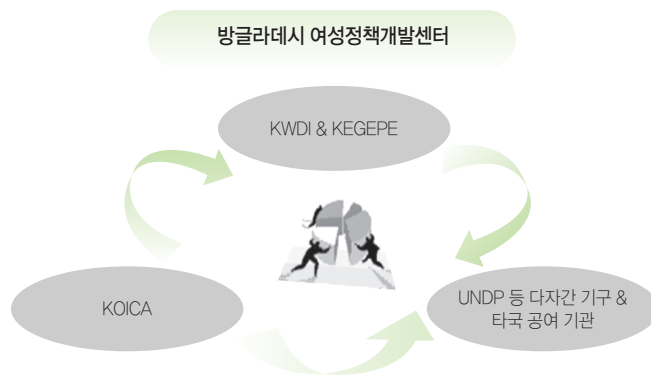
마.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의 실행을 위해서도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7〉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구조

방글라데시는 여성아동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성정책의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 대학연구소, 여성단체들을 모두 아울 수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즉 과거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이 기능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들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림 8〉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역할

방글라데시에 과거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이 여성을 교육 훈련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립 하는 데는, UNDP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무원의 성 인지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orea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KEGEPE)이 함께 다자간 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공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모델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